

2009 EU 의회 선거와 독일 총선 그리고 원자력

양 맹 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
서울대 원자핵공학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정보분석실장, 기술정책연구실장, 원자력대외정책연구실장, IAEA 기술협력담당관 역임
원자력학회 정책, 인력, 협력 연구부회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겸임교수

— 원자력산업 —

2009년 6월 4일에서 7일까지 나흘간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제7차 유럽의회 선거는 5억이 넘는 유럽 시민을 대표할 736명(지난 제6차 유럽연합 의회의 의석 수보다 49석이 감소)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번 의회 선거에서, 중도 우파인 유럽 국민당이 36%를 얻어 지난 의회에 이어 264석으로 원내 1당 자리를 굳힌 데 반해, 중도좌파인 유럽 사회당은 지난 의회보다 56석이 줄어든 161석을 차지하며 의석 비중이 27%에서 22%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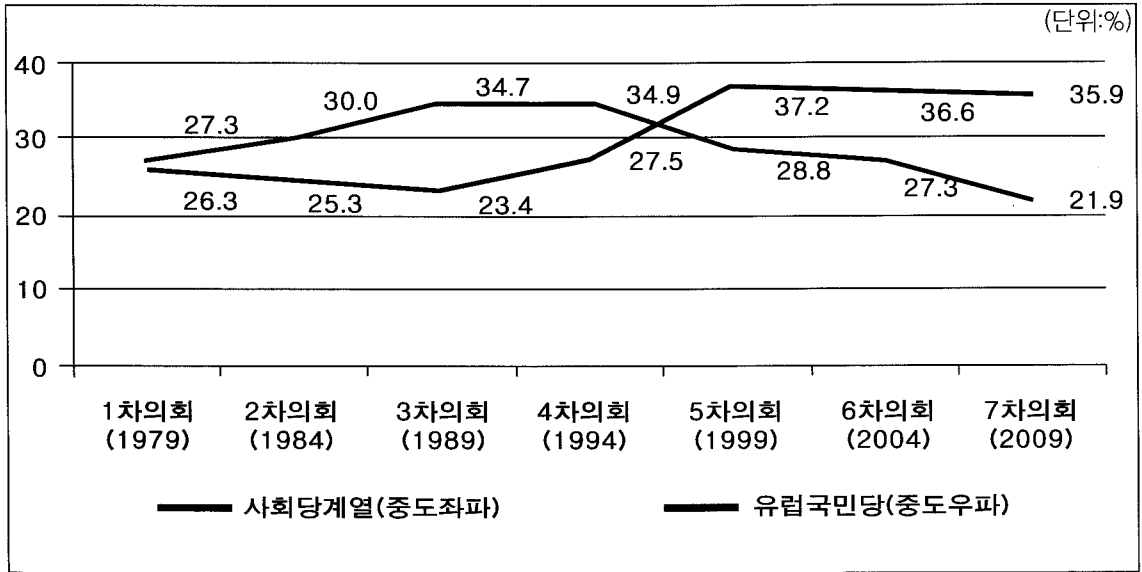
EU 27개국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18개국에서 우파가 승리하고 좌파는 6개국에서 승리하는 데 그치고 유럽연합의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모두 우파정당이 승리하였다.

녹색당은 72석(7%)을 획득하며 지난 제6차 의회의 44석(5%)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전통적인 중도좌파 정당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크게 약진하였다.

1979년 제1차 유럽의회 선거부터 직접 선거로 실시되어 왔으며 1994년까지는 사회주의 성향의 유럽사회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나 1999년 제5차 선거에서부터 우파인 유럽국민당의 우세가 지속되어 왔다.

유럽의회는 입법, 예산권 분야에서 EU이사회(각료이사회)에 대해 그 권한이 확대되어 왔으며, 행정,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집행위원회에 관한 견제 기능도 강화되어 왔다. 이번에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2014년까지 5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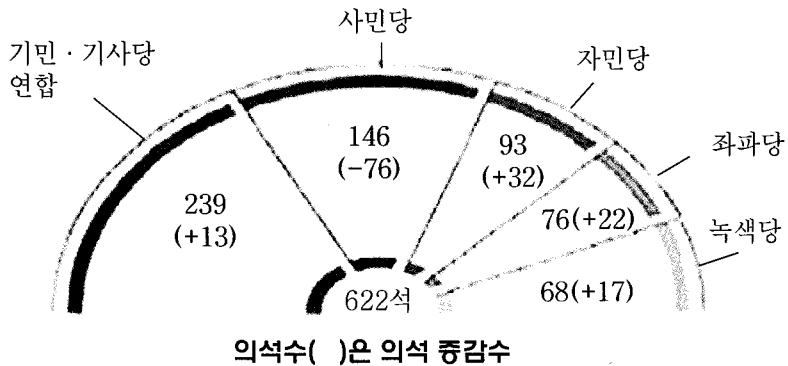
EU는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하면서 EU의 원전 이용국 수는 27개국 중 절반이 넘는 15개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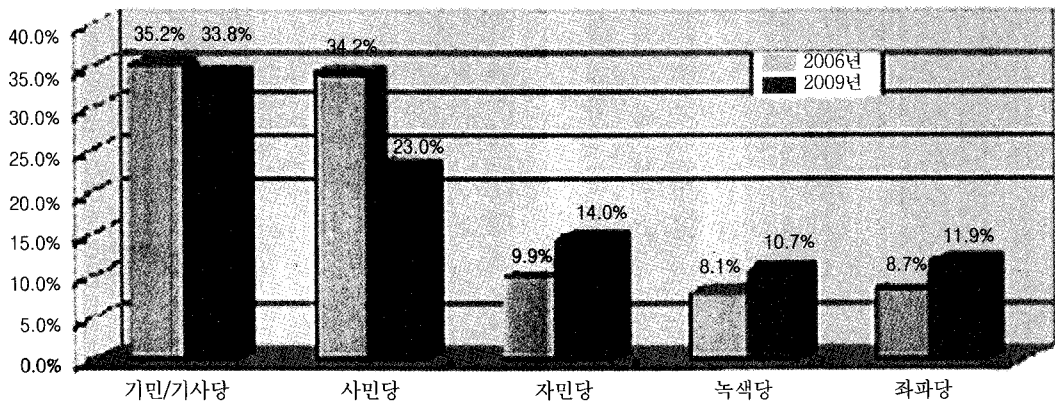
주 : 1994년 선거부터는 EPP가 ED와 연합으로 중도우파를 형성
 자료 : European Parliament.

출처 :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3 No. 25, 2009. 6. 24

〈그림 1〉 유럽의회 주요 정치 그룹의 의석 비중 비교



득표율



자료 : 독일선거위원회 (Bundeswahlleiter)

출처 :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3 No. 46, 2009. 10. 1

〈그림 2〉 2009 독일 총선 후 정당별 의석 변화



신연정 합의문 서명 장면, 왼쪽부터 Guido Westerwelle, Angela Merkel, Horst Seehofer

EU 의회는 최근 EU의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는 조치를 채택하여 친원전 성향을 보여주어왔다. 선거 기간 중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와 원자력이 주요 이슈의 하나로 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주요 이슈였다.

제7차 EU의회의 극적인 변화 가능성은 적게 보이며 원전 이용 지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당의 의석 수 증가로 향후 EU가 기후 변화, 환경 등의 정책에 있어서 국제 사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 독일 총선 결과

2009년 9월 27일 제17대 독일 총선(연방 하원의원 선거)이 실시되었다.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33.8%의 득표율을 기록, 23.0%에 불과한 사민당(SPD)에 압승을 거두었다.

사민당의 득표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총선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2005년 9월 총선 결과보다 무려 11.2% 포인트가 하락하였다. 반면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 소수 정당들의 지지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연방 하원 의석수에서는 기민/기사당이 2005년보다 13석 증가한 239석, 자민당이 32석 증가한 93석을 기록하여 메르켈 총리가 자민당과의 연정 선언으로 총622석의 의석 중 차기 우파연정이 모두

332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민당은 2005년보다 76석이나 감소한 146석, 좌파당과 녹색당은 각각 22석과 17석이 늘어난 76석과 68석으로 나타났다.

2009 독일 총선거의 최대 쟁점은 경제 위기 극복으로 최근 독일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메르켈 총리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가 선거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은 17기(시설 용량 20,339 MWe)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 점유율은 30% 수준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동독과의 통일 이후 구조련형 원전은 안전 문제로 모두 가동 중지되었다. 1998년 사민당 연정이 원전 폐지 정책을 추진하여, 원전 수명을 약 32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2002년에 통과되었으며 가동중인 원전은 2022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독일 내 에너지 생산은 1980년 대 중반에 최고에 달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석탄을 제외하면 다른 에너지는 수입을 통하여 수요를 충당하여 국외 의존도는 1990년 46.2%에서 2005년 61.6%로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 선거 때마다 원자력이 주요 이슈로 되어 왔다. 2009년 총선에서는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되었으며 원자력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2009년 7월 1일 독일원자력산업 50주년 기념식

에서 원자력 문제가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일산 50주년 기념식에서 국제적으로 원자력은 단기적으로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고 가까운 장래에 야심찬 원자력 개발에 기여할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에너지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또한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회당의 Sigmar Gabriel 환경장관이 독일일산 기념식에서 지난 50년 동안 원자력의 역할에 대하여 혹평과 비난을 하였다.

당시 여론 조사 기관 TMS-Emnid의 한 전문가는 사회당이 6월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원자력으로 지지율을 얻기는 어렵다고 단정하고, “지난 30년간 독일의 원자력 여론 조사에서 원자력의 선호를 보여주는 이유는 원자력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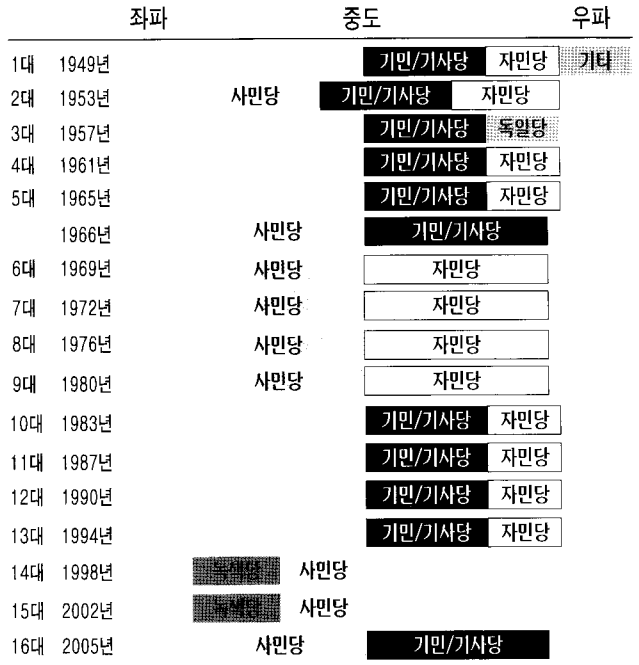
선거 후 메르켈 총리는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3당 연정의 내각 출범을 선언하고 연정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4주간의 협상 끝에 10월 26일 차기 정부의 정책에 합의했다. 이어 독일의회는 10월 28일 메르켈 총리를 향후 4년간 두 번째의 임기의 총리로 선출하였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11월 9일 다음날 11월 10일 연정의 정책 발표를 하였다. 124페이지의 연정합의문은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조건부로 원전 수명 연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비슷한 성향의 우파로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은 같게 나타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수명 연장에 지지 입장을 보여 주어 왔다.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의 6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가동 시한을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하고 2022년까지 17개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2005 대연정의 합의를 폐기하고 가동 시한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연정 협상에서 2022년까지 17개 원전의 가



자료 : Worldmark, Encyclopedia of the nations, 11th ed. 참고하여 편자 작성.

출처 :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3 No. 25, 2009 .6. 24

〈그림 3〉 독일 주요 정당의 연대별 연정 추이

동을 모두 중단한다는 기존 원전 폐지 정책을 폐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결정 사항에 대한 발표는 내년 5월 실시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6월 유럽연합 의회 선거와 9월의 독일 총선 결과는 친원자력 성향을 보이는 중도 우익의 정치적 환경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유럽에서의 원전 이용 정책 추진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이용 정책을 포기하였던 이탈리아는 최근 원자력 이용 정책으로 돌아섰으며, 영국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을 통하여 원전의 역할의 재정립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과 벨기에의 경우에도 원자력 폐지 정책에 대한 제한을 개정했으며 원전 폐지 정책의 재검토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OECD/IEA는 2007년과 2009년 각각 독일과 스페인에 대하여 원전의 옵션 유지를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